

“일본 21세기 비전”을 통해 본 일본의 대외경제전략

작성자 : 정 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jung@kiep.go.kr, ☎ 3460-1202]

主要內容

- 일본 수상의 자문기관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지난 4월 19일 제8차 회의에서 “일본 21세기 비전”(이하 비전 보고서)을 채택하였음. 비전 보고서에는 향후 일본대외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제시되어 있어 한일간 경제협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음.

 - 비전 보고서는 4개 분과의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한일관계에 의미가 있는 분과는 “글로벌화”분과로 본 자료에서는 “글로벌화”분과의 보고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역점을 둠.

- 비전 보고서는 먼저 2030년 시점에서의 일본경제의 모습을 두 가지 상황(글로벌화에 실패한 경우와 성공한 경우)을 설정하고 묘사하고 있음.

 - 어느 상황에서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경제의 지위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중국경제에 비해 그 규모가 현저히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화”분과 보고서는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경제의 개방화를 제안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지역을 중시할 것, ▲현재의 경제통합과정을 더욱 가속화할 것, ▲국내 노동시장을 대폭적으로 개방할 것,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 ▲국내의 교섭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아시아에서의 통화협력체제를 구축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음.
 - 한편, 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CO2 배출권 거래시장의 창출, 에너지 절약기술의 시장 확대 등 향후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제언이 일본의 대외경제정책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이나, 일본의 대외교섭체제가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비전 보고서의 내용에 한국정부가 한일FTA 교섭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한일협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1. “일본 21세기 비전”이란?

- 일본 내각부 산하에 설치된 ‘경제재정자문회의’는 2005년 4월 19일 개최된 제 8차 회의에서 “일본 21세기 비전”을 채택하였음. 비전 보고서는 2030년까지의 일본경제의 장기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대외경제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대일외교 및 한일 FTA라는 현안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음.
-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일본의 경제 및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수상에게 자문하는 합의체 형식의 자문기관임. 고이즈미 수상의 구조개혁노선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일본경제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는 핵심적 기관임.
- 동 자문회의는 고이즈미 수상, 타케나카 경제재정담당대신, 호소다 관방장관, 나카가와 경제산업대신, 타니가키 재무대신, 아소 총무대신, 후쿠이 일본은행총재 등 정부 측 인사 7명과 4명의 민간위원을 포함,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문회의는 2004년 9월 “일본 21세기 비전”에 관한 전문 조사회를 설치하여 일본경제의 장기 시나리오 분석에 바탕을 둔 장기전략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동 전문 조사회는 ‘경제재정전망’, ‘경쟁력’, ‘생활·지역’, ‘글로벌화’ 등 4개 분과를 설치하고 각 분과별 토론결과를 “일본 21세기 비전”으로 정리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하였음.
- 비전 보고서 중에서 특히 한국의 대일외교정책 및 한일 FTA와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은 ‘글로벌화’ 분과임.
- 동 분과에서는 한국의 대일관계에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한일 FTA 및 대일외교정책에 참고가 될 만한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음.
- 특히, 일본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정책방향, FTA 협상에서의 농업개방, 인력개방, 안보정책 등의 큰 틀이 제시되어 있음. 이러한 기본방향은 현재의 일본정부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일협상 및 대일외교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 ‘글로벌화’ 분과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분과 책임자 伊藤隆敏(이토 타카토시, 동경대 교수)를 비롯하여 植田和弘(우에타 카즈히로, 교토대 교수), 田中明彦(타나카 아키히코, 동경대 교수), 浦田秀次郎(우라타 슈지로, 와세다대 교수), 深川由紀子(후카가와 유키코, 동경대 교수) 등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경제학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보고서가 수상에게 직접 보고되었다는 점에서 본 분과의 보고 내용이 일본의 장기전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
- 본 자료에서는 이 분과에서 제시된 일본의 장기대외전략을 정리하고 한국의 대일정책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2. 2030년의 일본경제예측

- ‘글로벌화’ 분과는 일본이 글로벌화라는 세계경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와 능동적으로 대응했을 때의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각 케이스별로 2030년의 일본경제의 두 가지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음.
- 적극적인 개방정책에 실패했을 경우, 즉 과거 10년간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환율변동 등 거시경제변수의 트렌드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2030년의 일본경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회피해야 할 시나리오).

<표 1> 주요국의 장기적 성장률과 명목 GDP 추이(실패 케이스)

	‘04년 GDP (조 달러)	비중 (%)	실질성장률 (%)	실질환율 변화율 (%)	‘30년 GDP (조 달러)	비중 (%)	1인당 GDP (‘04년, 천 달러)	1인당 GDP (‘30년, 천 달러)
세계	30.0	100	-	-	117	100		
미국	11.7	39.2	3.3	-	44	37	39.7	121
EU(12개국)	9.4	31.3	2.0	0.4	28	24	30.3	90
일본	4.7	15.6	1.2	-3.3	4	4	36.5	35
중국	1.6	5.5	8.6	1.0	30	25	1.3	21
한국	0.7	2.3	4.9	-1.9	2	2	14.3	48
인도	0.6	2.1	6.1	-0.3	4	4	0.6	3
브라질	0.6	2.1	2.4	-2.5	1	1	3.5	4
러시아	0.6	1.9	3.6	1.6	3	3	4.0	28

자료: “글로벌화 WG 보고서”

- 일본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4%)는 현재(16%)의 4분의 1로 하락함. 명목GDP규모는 4조 달러로 중국의 30조 달러에 비해 압도적으로 작아짐.
-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로 한국의 4만 8천 달러보다 더 작아짐.
- 경제적 지위하락은 미일동맹관계의 의미를 약화시켜 미일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저하를 초래하고 특히 중국의 발언권이 커져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상실하게 함.

□ 한편,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전개하고 구조개혁에 성공했을 경우의 일본경제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음(성공 케이스).

<표 2> 주요국의 장기적 성장률과 명목 GDP 추이(성공 케이스)

	'04년 GDP (조 달러)	비중 (%)	실질성장률 (%)	실질환율 변화율 (%)	'30년 GDP (조 달러)	비중 (%)	1인당 GDP ('04년, 천 달러)	1인당 GDP ('30년, 천 달러)
세계	30.0	100	-	-	116	100	-	-
미국	11.7	39.2	3.0	-	37	32	39.7	102
EU(12개국)	9.4	31.3	1.8	-	21	18	30.3	68
일본	4.7	15.6	1% 중반	-	10	9	36.5	83
중국	1.6	5.5	6.8	3.9	36	31	1.3	25
한국	0.7	2.3	4.0	-	3	2	14.3	55
인도	0.6	2.1	4.0	0.6	3	2	0.6	2
브라질	0.6	2.1	3.6	0.4	3	2	3.5	11
러시아	0.6	1.9	3.6	1.8	3	3	4.0	27

자료: “글로벌화 WG 보고서”

- 이 경우에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경제의 비중은 현재의 16%에서 9%로 하락하자만 실패한 케이스에 비해 하락의 정도가 절반 정도로 줄어듦.
- '30년의 명목GDP 규모(10조 달러)는 중국(36조 달러)의 약 4분의 1 정도에 머무르게 됨. 성공적인 경우에도 일본경제지위는 하락하고 중국경제보다 규모 면에서도 훨씬 작게 됨.
- 1인당 GDP는 8만 3천 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한국의 1인당 GDP는 5만 5천 달러로 한일간의 소득격차는 크게 저하됨(단,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일본경제의 지위는 구조개혁 및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공 케이스에서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러나 개혁정책에 실패할 경우에는 1인당 GDP가 현재 수준보다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일본정부에 건의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글로벌화” 분과가 제안한 대외정책(경제, 외교, 안보)의 개요는 이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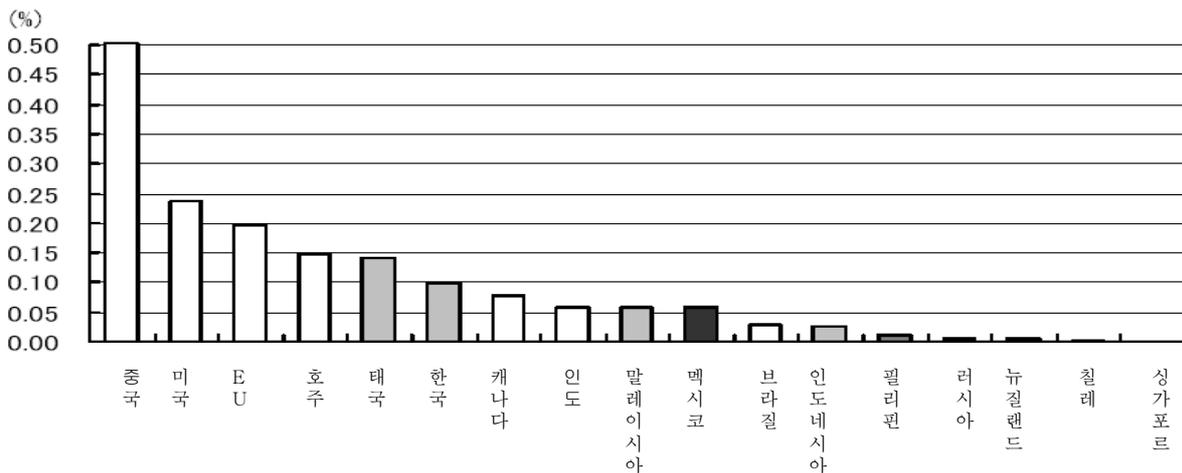
3. 일본의 장기대외전략

- 지역경제통합에서 “아시아지역의 중요성”을 강조
 - “글로벌화” 분과는 “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국제분업구조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일본은 본사기능, 고부가가치산업, 고부가가치 공정을 유지·강화할 것.
 - 중국 및 ASEAN에서의 생산공정의 국제간 이동은 시장 메커니즘에 맡길 것.
 - 이러한 국제분업구조 재편을 위해 중국 및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를 것.
- 경제통합의 “가속화”를 강조
 - 한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FTA 협상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FTA협상의 진행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이런 속도로 협상이 진행 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위험이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이 제외된 자유무역지대에 “나중에 참가할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제도·기준에의 조화가 요구되어 대응이 한층 더 곤란해진다”고 우려하고 있음.
- “중국” 및 “ASEAN”과의 “포괄적 경제연대협정” 체결이 가장 중요
 - 특히 중국 및 ASEAN과의 경제통합은 일본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FTA를 통해 이들 지역에서의 국제분업구조 재편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홍콩과의 교역을 포함)하였고 일본으로서는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할 국가임.
-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관세철폐의 차원을 넘어서 **서비스 무역, 투자, 지적재산 보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EPA(포괄적 경제연대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동 분과가 실시한 **설문조사**(싱가포르, 방콕, 홍콩, 런던, 뉴욕에서 활동하는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본이 가장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해야 할 대상국은 **ASEAN과 중국**이었으며 **한국은 미국, EU보다 우선순위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의 CGE 모형 분석결과에 의하면,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실질 GDP 증가효과)는 **중국(0.5%)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 FTA의 실질 GDP 증가효과



- 한편,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는 미국(0.23%), EU(0.20%), 호주(0.15%), 태국(0.14%), 한국(0.10%)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기 체결국가인 멕시코(0.06%), 싱가포르(0%)의 효과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과의 FTA는 “질 높은 경제통합모델”로

-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제외한 유일한 OECD 국가이므로 일본과 **질 높은 FTA를 체결하여 기타국의 모델로 삼아야 함.**
- 한일 양국에서의 경쟁환경정비, 산업협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제도의 조화를 추진하여 **관세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통상정책 등 정책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인적교류의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역내 통화협력”이 필수불가결함을 강조

- 일본이 중심이 되는 “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데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통화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음.**
- 동아시아는 무역, 투자 면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해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높은 FTA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면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배제된” 동아시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아시아지역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철폐로 무역자유화가 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맹국간 환율변동이 심하다면 무역, 투자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동아시아 통화가 대내적으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며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자본이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통화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엔, 원, 위안, ASEAN 통화를 포함하는 **‘아시아 배스켓 통화단위’를 창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 국내 노동시장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을 강조

- 일본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도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와 “단순 노동자”로 구분하고 고도기술 노동자에게만 일본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왔음.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는 상황 하에서 잘못된 정책이며 **대폭적인 노동시장 개방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이 권고되고 있음.**
 - 취업가능한 재류자격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것.
 - 이미 자격화되어 있는 개호관계 직종은 취직가능한 입국자격으로 할 것.
 - 보조교원, 보육사, 비서, 시스템 엔지니어, 시반공 등 다양한 직종을 취업가

능한 입국자격으로 할 것.

- 해외에서의 자격취득을 가능하게 할 것.
- 일본인으로는 부족한 노동자 수를 미리 계산하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현행 정책은 철폐되어야 함. 일본어와 국가자격취득을 전제로 한 후, 이후에는 노동시장의 수급에 맞기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필요함.

□ FTA 교섭에서 농업이 협상의 방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을 강조

- FTA나 WTO협상에서 농업보호 때문에 일본의 국익이 저해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일본정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신속하게(최대 10년) 수량 제한이 없는 관세철폐를 추진해야 함.
- 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의 국내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 국경조치에 의한 농업지원(소비자 부담)으로부터 재정부담에 의한 농업지원(납세자 부담)으로의 이행: 지속적인 농업생산을 할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직접지불로 지원
 - 쌀과 같이 생산자가 매우 많고 브랜드화에 시간이 걸리는 품목에 대해서만 10년 이상의 보호조치가 필요
 - 농업에서 주식회사에 의한 농지취득과 생산을 인정할 것
 - 농산품의 고급화, 특화에 의해 수출을 증대시킬 것

□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

- 일본정부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분야 중, 환경, 에너지 관련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
- 특히, 기후변동협약의 국제적 정착을 위해서 일본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나아가 일본의 에너지 절약 기술,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기술원조와 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마련을 강조하고 있음.

□ 수상중심의 기동적인 방위체제구축을 강조

- “글로벌화” 분과는 “**안전보장 및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수상이 중심이 된 방위관련 의사결정체제의 수립을 강조하였음.
- 유효한 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방위 시스템 구축, 영해 침범 대응, 세계 각지에서 평화구축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자위대를 비롯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방위기능의 **각 분야에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
- 방위체제에 있어서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상중심의 집행체제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세계 각지에서 수집할 수 있는 체제강화가 필요함을 강조
-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장비조달을 위해 일본은 **병기관련 기술 중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은 지속

- 미국과는 “**동맹관계**”, 유럽과는 “**우호관계**”, 동아시아와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평화롭고 안정적인 동아시아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의 안정화 기능을 하고 있는 일미동맹의 역할은 금후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동아시아 협력의 핵심은 일중관계”라고 강조

-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먼저 **민간중심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이를 정부차원에서 반영하는 전략임.
- 즉 **중국경제의 대일의존도를 높인 뒤 협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도모하려 하고 있음.
-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 바,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보다 기동적인 의사결정체제 구축을 강조

- 현행 교섭체제에서는 우선순위의 결정 등 전체적인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결여되어 있음. 교섭의 대외적 책임관계가 불명확하여 기동적인 대응이 불가능함.
- 관계하는 정부기관이 너무 많아 이들 간의 조정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됨. 또한 국내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함.
- 따라서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 하에서 개별 이해관계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함.
- 예를 들면, 수상직할로 대외적인 교섭의 기획, 입안 및 최종적 결단을 할 수 있는 “대외 교섭실”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혹은 대외교섭에 경험이 풍부한 역량 있는 인물에게 통상교섭을 일임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앞으로의 1, 2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

- “글로벌화” 분과는 “앞으로 1, 2년 안에 일본이 동아시아 주요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일본이 제외된 아시아 FTA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음.
- 나아가 향후 1, 2년 내에 UN 상임이사국 진입, 기후변동협약의 후속조치 등,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1, 2년 내에 글로벌화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내적 대응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4.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 일본의 대외교섭체제 재정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함.

- “글로벌화” 분과의 제언의 핵심은 현재의 지리멸렬한 교섭체제를 일사불란한 교섭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임. 이러한 일본 내 교섭체제변화는 한일 FTA, 한일간 외교교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화” 분과의 제언에 대하여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등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수상 및 각 성청간의 정치적 힘겨루기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힘겨루기의 결과 어떠한 교섭체제가 형성될 것인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안임. 특히 한일 FTA관련 교섭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글로벌화”분과의 주장을 대일교섭에서 적극 활용해야 함

- “농수산물시장의 전면개방”,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인 수용”, “협상속도의 가속화”, “한국과의 인적교류 적극 확대” 등의 주장은 사실상 한국정부의 대일 요구사항 중의 하나임.
- 따라서 한일 FTA 협상의 장에서 “글로벌화” 분과의 주장과 논리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함.

□ 환경·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중시해야 함.

- “글로벌화” 분과 보고서에는 환경협력, 에너지협력이 중요한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분과의 인적구성에서도 환경,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음. 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관심이 이 분야에서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 현재의 한일 경제협력에서 이들 분야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한중일 대기오염문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CO2 삭감대책, CO2 배출권거래제도의 아시아지역으로의 확대, 에너지 절약기술, 동아시아에서의 석유확보전략 등 환경·에너지 면에서 일본과의 협력가능성은 향후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들 분야에 대한 일본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 한국은 일본의 최적 파트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한일 FTA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